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28
----------	------

발의연월일 : 2020. 12. 4.

발 의 자 : 이장섭 · 강민정 · 임호선  
양정숙 · 이병훈 · 박덕흠  
도종환 · 인재근 · 윤영찬  
강훈식 · 홍성국 · 이규민  
엄태영 · 변재일 · 이용선  
김용판 · 한병도 · 오영훈  
김승원 · 김영배 · 신영대  
박광온 · 조수진 · 소병철  
의원(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상

황임.

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목적을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나.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안 제11조).
- 다.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 라.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

마.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26조).

바.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는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희생자심사”는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근리사건에 관하여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 및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

## 관한 사항

5.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

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노근리평화공원 조성·운영 등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보상 활동에 관한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

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활동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고서의 작성, 보고,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보상금)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4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및 결정)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 중 “120일”은 “90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 ①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2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배상 의제)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25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위령공원·위령묘역 등 추모공간 조성 및 기념공간 건립
2. 희생자 추모 및 기념 행사 개최
3. 추모공간, 기념공간 및 노근리사건 현장의 보존·관리
4. 국내외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사업
5.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사업

6.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등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 6·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

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국가등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치유센터를 노근리평화공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노근리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노근리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희생자·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3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각각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